



[종합] 국내 車시장 SUV가 장악 싼타페·렉스턴 “픽 미!” 06



Economy

코스피	2396.56 (-56.75)	코스닥	829.96 (-28.21)
금리 (미국 3년)	2.25 (-0.01)	환율 (원/달러)	1086.60 (-4.90) (7일)

삼성이 움직인다... JY, 반도체 투자 전격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위원회

2생산라인 건설 추진 확정 대규모 M&A·설비 확장 등 미래먹거리 창출 속도 기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외경.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이후 삼성의 ‘스피드 경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 추진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첫 투자 발표다.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인수합병(M&A)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외신 역시 이 부회장의 신규 투자를 통해 혁신 경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전 7시 30분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 삼성전자의 3대 사업부문장들이 주요 구성원이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실무기구다.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모두 여기서 이뤄진다.

이번 경영위원회에서는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기초 골조공사를 시작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첫 투자 발표다.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인수합병(M&A)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외신 역시 이 부회장의 신규 투자를 통해 혁신 경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이 석방 후 삼성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M&A를 시도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삼성이 리더십 공백을 끝내고,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너머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언론인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만큼 M&A나 반도체 설비 확장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며칠 전까지도 투자 계획에 대해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 석방 며칠도 안 돼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후 삼성의 중장기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석방 사흘째인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경영 복귀를 위한 구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으로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삼성전자의 혁신을 이끌었다”며 지난 2016년 미국의 자동차 오디오기업인 하만 인수를 사례로 들었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이 석방 후 삼성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M&A를 시도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삼성이 리더십 공백을 끝내고,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너머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언론인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만큼 M&A나 반도체 설비 확장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며칠 전까지도 투자 계획에 대해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 석방 며칠도 안 돼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후 삼성의 중장기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석방 사흘째인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경영 복귀를 위한 구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손 흔들며 인사하는 북측 응원단

7일 오후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북측 방문단이 강

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해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 논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혁신창업 메카로 재탄생

중기부 세부 운영방안 발표

장점은 살리고 단점 보완 벤처·중견기업·대학 등 참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있는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가 ‘지역 혁신창업 메카’로 탈바꿈한다.

이곳에서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선 창업자금, 연구개발(R&D) 지원,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또 혁신창업 포럼,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센터들 ‘한국판 TED’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구조는 ‘개방’을 통해 지역의 벤처·중견기업, 대학 등을 폭넓게 참여 시키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 줄곧 써왔던 ‘창조경제’란 간판은 바꿔달지 않기로 했다. 일반에 각인된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정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혁신센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가장 주목할 것은 ‘창업’이다.

특히 혁신센터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세종, 전북, 경남, 전남, 제주 등에 두루 자리를 잡고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 지역의 창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을 발굴할 때는 엄격하게 하되, 확실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센터가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은 정부의 창업·투자 지원시 패스트 트랙으로 연계해 일관지원할 계획”이라며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센터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확대

하고 아울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항이나 팁스(TIPS) 운용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 스타트업들이 혁신센터를 졸업하면 지원이 끊겨 추가 성장에 애를 먹던 기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의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나 테크노파크(TP)와 연계해 투자 및 판로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대기업 외에도 혁신센터 협력파트너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혁신센터의 경우 기존 CJ 외에도 스타벅스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벤처캐피털인 타임 와이즈와 전문 액셀러레이터 N15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상화폐는 유가증권... 韓정부가 가격 조작”

美 의회 가상화폐 청문회

해외 투자자 보호 못 받아 ICO 자격 제한 등 논의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강조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라고 부른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 투자자 역시 IPO(기업공개) 투자자에 준한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못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의회에서 가상화폐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 필요하다면 ICO 참가 자격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주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연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

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며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ICO가 불법이며 이들을 제도에 끌어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증권법은 증권 거래를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수완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2면에 계속>

/오세성 기자 sesung@